

## 농림수산식품부

### ▶ AI 방역체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월 11일부로 고병원성 AI가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 시·군에도 그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 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게 됐다.

또한 이미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구제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AI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전남 영암과 나주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로 확대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모두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금 농가들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축사 내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하고, 특히 도보로 외출하는 경우에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축사 내로 들어가지 말 것
- 가금농가가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며 축

사시설에 대하여는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밖에서 왕겨를 반입할 경우 포대를 재활용하지 말 것과, 포대를 옮길 경우 바닥에 끌지 말 것, 특히 가금분뇨를 반출하지 말 것, AI 발생지역의 가금을 입식하지 말 것

### ▶ 해외 여행 축산인, 귀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및 AI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장폐쇄 등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 시 소독 의무화,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 등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축산농장주 등 축산관계자가 입국할 때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독일산 가공제품 잠정 검역중단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공육, 돼지고기, 가축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최대 6pg)되었다는 보도가 확인되어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으며, 현재 보관 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 본격 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품목은 ▲쌀·배추김치(100㎡ 이상 → 모든 음식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모든 음식점) 등 음식점과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농산물 가공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식염,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농산물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들 신규품목에 대해 전국 순회교육, 홍보자료 배포, 현장 지도활동 등 교육·홍보를 겸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벌위주의 단속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알고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5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 지식경제부

### ▶ 제주도행 축산물 소포우편 접수 중단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로 가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의 우체국 접수가 전면 중단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제주특별자치도 요청에 따라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중지한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

해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금지' 고시를 시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접수가 중단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짚,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한 것은 반입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 통계청

### ▶ 지난해 4분기 닭 사육규모 증가

지난해 4분기 한우·육우, 돼지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닭 사육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1억5천만 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으로 돼지의 경우 전체의 9% 가까이가 살처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4분기(12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 사육 규모는 335만2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2만7천마리(0.8%)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육우는 292만2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2만8천마리(0.9%) 감소했고, 젖소는 43만마리로 1천마리(0.2%) 늘었다. 한·육우 감소는 산지 가격 하락과 송아지 생산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말했다.

돼지 사육 규모는 988만1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2만마리(0.2%) 줄었다.

닭은 1억4920만마리로 전 분기보다 821만마리(5.8%) 늘었다. 이 중 산란계는 6천169만1천마리



로 159만6천마리(2.7%), 육계는 7천787만1천마리로 660만마리(9.3%)가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은 “육계는 가격이 호조를 보이는데다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국내산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육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구제역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매몰된 돼지 숫자가 5천마리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에 이날 오전 8시 현재 매몰 대상 소·돼지 숫자인 94만5천503마리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사육되던 소·돼지의 7% 이상이 살처분·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는 전체의 2.8% 수준이지만 돼지는 8.5%를 웃돌았다.

한편 작년 4분기 소 사육기구는 전 분기보다 1.5%, 돼지는 5.2%가 각각 줄어든 반면 닭 사육기구는 1.9% 늘어났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닭고기 수출 증대에 정부도 발벗고 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닭고기 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 건국대 교수)의 세부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출 상대국별 닭고기 제품 위생 검사관리기준규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수출 상대국에 제품 수출을 하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검역, 위생 기준을 선행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검역원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의 동등성 평가단의 우리나라의 닭고기 제품 생산 공정 및 정부의 위생관리 현황에 대한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닭고기 제품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수출가능성과 시장을 고려하여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인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입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상대국의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 요구 조건 등 관련 규정들을 조사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중앙수의검사소,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관계관과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향후 한국의 닭고기 제품 수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통해 수집한 상대국 수출입 관련 법규 자료들은 번역한 자료들을 발간하여 이들 국가들의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검역원 위성환 축산물규격과장은 “향후 사업단의 닭고기 수출 전략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가능성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대상국의 제품 기준규격 및 위생조건을 조사하는 등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역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며, 금년 7월에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대비하여 유럽 국가들의 닭고기 제품 수출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고, 사업단을 중심으로 닭고기 제품 수출 5천만 달러 수출액 달성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 ‘한국 수의학사’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고대 수의학 태동기부터 근대기(~1962년)까지의 한국 수의학사를 시대별, 사건별로 조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수의학사’를 발간했다.



이번에 출판된 '한국 수의학사'는 원로 수의사인 이시영 선생(전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장)의 집필 원고를 근간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편집 및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하게

되었다.

고대 수의학의 태동부터 시대별, 사건별로 기술한 '한국 수의학사'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적 기록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제1장은 고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수의학 발달과정을 기록했으며, 제2장은 고려시대 수의분야 조직체계와 중국의 영향, 제3장에서는 조선시대 질병발생상황과 주요 수의서적, 제4장에서는 대한제국시대 수의현황, 제5장은 일제강점기시대 수의업무, 마지막으로 제6장은 해방 이후의 수의업무 변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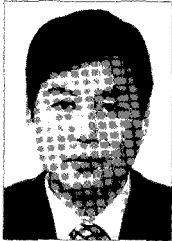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출판은 수의학 역사가 시작된 지 반만년, 현대 수의학 도입 100년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담아낸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미진한 부분이나, 동물약품, 실험동물 분야 등 이번에 언급되지 못한 분야와 함께 1962년 이후 현대 수의학에 대한 기록도 꾸준히 수집·관리하여 추가 출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수의학사'는 검역원 수의과학도서관에서 전자책(<http://ebook.nvrqs.go.kr>)으로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

### ▶ 신임 장원경 원장 임명



장원경 원장

장원경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축산과학원장에 임명됐다. 양창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원경 신임원장과 양창범 신임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지난 1월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장원경 신임원장은 1955년생으로, 건국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뒤 같은 대학에서 축산학 농학석사와 축산학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84년 연구사로 축산시험장에 입사, 이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관으로 활동했다. 축산기술연구소 응용생명공학과장과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축산자원개발부장을 지냈다.

양창범 신임부장은 1958년생으로, 제주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했고 축산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는 동물자원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을 역임했다.

### ▶ AI 발생으로 종란 이동, 긴급 부화 착수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 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닭 종자의 멸실 방지를 위해 종란을 수집해 수원에 있는 축산생명환경부로 옮겨 긴급 부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닭은 5품종 12계통으로 계통당 200수씩 총 2,400수를 인공수정 후 종란수집에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수집량은 1,000개 정도이다.

종란의 경우 2주 이상 보관시 부화율이 급격히 저하(85% → 60% 이하)되어 장기간 보관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에서는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종란 10,000여개를 수집하고 별도의 소독 과정을 거쳐 수원에 위치한 축산생명환경부로 옮겨 지난 1월 24일 긴급 부화에 착수했다.

또한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도 24일까지 총 6,000개의 종란을 수집해 부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서옥석 과장은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은 멸종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 고유의 토종닭을 복원해 낸 아주 소중한 유전자원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다"며 "인근 농가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해 수원 축산생명환경부와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긴급 종란부화를 시작했다"고 말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과 시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현재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종축 및 유전자원을 분산 보존시켜 놓았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1월 24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원, 자체수입 비율 등을 토대로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기관장 평가, 각종 지침 등의 의무적용을 받게 된다.

그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2006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08년 6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금년 1월 24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것이다.

앞으로 기준원은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준정부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 HACCP 교육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월 25



일 기준원 중부지원 교육장에서 농협중앙회 안심 축산물판매장 HACCP도입을 위한 HACC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물판매장 담당자 및 관련업체 담당자 등 총 45명이 참석했고, 심사2처장의 기준원 소개에 이어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식육판매업 HACCP 추진현황 및 작업장 시설, 설비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안심축산물판매장 관계자들은 작업장 시설, 설비 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식육판매업 HACCP 도입 시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원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축산물HACCP기준원 관계자는 비록 국내 축산물 HACCP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흘렀으나 올해를 식육판매장 HACCP 적용 활성화의 원년의 해로 삼고, 농협 안심축산물 판매장의 원활한 HACCP 도입을 위하여 기준원 식육판매업 HACCP 담당자들이 현장기술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우편엽서로 고객님의견 접수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료채취 서비스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은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 시료채취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편  매우 불편

▶ 직원의 응대태도와 말씨가 친절했나요?

#### ● 친절직원 추천 / 불친절직원 신고

▶ 칭찬: ( 친절  , 불친절  )

▶ 사유:

#### ● 고객님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의견 엽서'를 활용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정기간행물인 '방역위생' 정보지에 '고객의견 엽서'를 4분기(1, 4, 7, 10월)마다 첨부하여 연간 68,000부의 엽서를 농가에 발송해 고객만족도 사후관리 및 고객들이 느낀 만족도, 친절직원 추천, 건의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방역본부는 '고객의견 엽서'를 통한 고객의견 수렴 서비스가 기관 홍보 뿐만 아니라 소속직원의 자기홍보를 유도케 하여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엽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무료통화상품권을 증정하고, 우수한 의견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방침이다. 